

독자권익위원 칼럼

탄소중립

박봉순

동신대학교 지역협력본부장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거나 포집, 저장, 활용을 통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세계 곳곳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해일,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계속 늘어나면서, 120년간 지구 평균 온도가 약 1.2도 상승했다. 최근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평균 온도가 1.4도 상승해 심한 온난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1997년에 일본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고, 이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15년에 '파리협정'을 채택해 2016년 11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한다. 온실가스 농도와 지구 온도 상승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어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5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2020년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파리 협정 체제로 변화하며 나타나게 된 개념으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춰 NDC를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회에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18년 총 배출량은 7억2700만 t이나 순배출량 기준으로는 6억8600만 t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 수송 등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을 '0'에 가깝게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하고, 숲 복원, 블루카본 기술, 탄소제거기술 활용 등으로 탄소 흡수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지역, 산업의 기반을 탄소 배출이 적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협력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법적 규제 기반하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탄소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체계적인 감축 정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 모색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에 대한 협조와 지원책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ESG 경영을 도입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지속적인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이룬다는 시민정신으로 주도적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전력 소비량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사용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는 등 개인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운동에 참여하는 생활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자보 운동(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타기, 보행)을 생활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현재 지기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미래후손들에게 건강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마련해 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기고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주택관리사의 사회적 공동체 가치 실천

아파트 구조는 헬근코크리트다. 상냥감을 쌓아둔 것처럼 수직으로 겹쳐 이어져 있다. 대단히 건조한 생활 방식을 담고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편의성이 우수하다.

개인주의 세대와 아파트 문화는 결합했다. 건물 안에서 이동 수단은 엘리베이터이다. 세대 현관문을 닫으면 의사소통은 단절된다. 초인종을 눌러 인사하지 않으면, 몇 년 채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른다.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다.

그래서 법령을 제정해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있다. 이 사람들이 공동주택관리종사자다. 이들 중 주택관리사가 관리감독자이며 관리주체이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시설물을 관리한다.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한다. 건축물의 장수 명화를 계획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짜야 하고, 지원사업을 찾아서 아파트 내에서 여러 가지 자치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아파트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출현한 특별한 직업군이다. 그 역할은 갈수록 복잡해졌다. 그러나 맡은 역할에 비해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으로 큰 대접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불우이웃에 대한 자선 행위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관공서의 각종 업무까지 도맡아야 한다. 행정기관의 손만으로는 쉽지 않다. 단절되고 건조한 아파트 구조에서 주택관리사는 윤희유와 같은 준공영직

인 역할을 맡고 있다. 요컨대 주택관리사의 사회적 역할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필요하다.

지난해 성탄절 즈음 국제라이온스협회는 불우이웃에게 케이크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 그러나 정작 불우이웃을 찾는 것과 전달하는 일이 난감했다.

광주 지역 아파트 주택관리사에게 협조를 얻고, 이들이 아파트 내의 불우이웃에게 케이크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직업이 됐다.

광주의 주택관리사는 사회적 공동체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주택관리사 1004(천사)명은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직무교육장에 헌혈 버스가 온다. 캠페인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벌써 410회 헌혈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에, 주택관리사의 '천원의 기적' 캠페인을 통해 1300만원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1000원으로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는 매년 겨울철, 아직도 연탄이 필요한 곳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따뜻한 사람들'의 후원자가 돼 연탄을 구입하고, 직접 배달하는 데 많은 주택관리사가 함께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라는 한국의 특별한 주거 문화와 함께 탄생한 직업이다.

이들은 사회적 공헌을 통해 그 위상을 더욱 키울 것이다. 왜냐하면, 아파트 공급물에 비례해 주택관리사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취재수첩

광주여성가족재단 '돌봄 사업' 힘 실어야

김다경

문화체육부 기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2015년부터 8년 연속 급감하던 수치가 반등한 셈이다. 하지만 낙관할 수 없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0명을 밑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소를 더불어 현재 양육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한 지역사회돌봄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설계하고 있어 주목된다.

올해 재단은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양육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영유아돌봄지도와 돌봄·양육 협력체계구축 및 홍보,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육자대상 성평등·성교육 운영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돌봄 공공성 강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픈 아

이 긴급병원동행서비스사업'을 동구에 이어 남구에서도 확대 추진한다.

맞벌이 등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이혼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부터 귀가까지 원스톱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뿐 아니라 광주시 협력 사업인 공동육아 품앗이 사업 '삼삼오오 이웃돌봄' 또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광주시와 협력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따뜻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는 새로운 돌봄 서비스로, 이웃 간의 맞돌봄 체계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돌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양육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양육의 공공성에 공감하는 다양한 정책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OPINION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사설

광주 북구 '10분 거리 생활 SOC' 호평

광주 북구가 추진한 '내집앞 10분 거리 생활 SOC'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실 북구는 전체 인구의 1/3 정도인 43만명이 거주하는 광주에서 가장 큰 자치구이지만 문화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광주에서 살고 싶은 자치구를 꼽을 때면 항상 순위권 밖에 있었다. 다시 말해 '살의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예전에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만사 OK'였지만 이제는 취미, 건강, 복지는 물론 체육시설, 영화관, 백화점 등 문화시설과 자녀들의 학군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북구는 주민들이 살고 싶은 곳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가 시작한 2018년부터 6년간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이 기간 '10분 거리 생활 SOC 시대'를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구청장이 발로 뛰면서 국·시비 등 총 1400여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생활 SOC를 확충해 나갔다. 특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편의시설을 거주 공간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도시재생 사업도 병행해 나갔다.

그 결과 2019년 치매안심센터로 시작으로 2020년 북구문화센터, 2021년에는 행복어울림센터, 2022년 북구종합체육관 2023년 우산공영주차장, 지난해 운암복합문화센터 등 6년간 생활 SOC 20곳이 문을 열었다.

이 시설들은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한다.

북구의 중심 상권인 용봉지구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59면의 주차면이 확보되면서 그동안 제기된 주차난이 일정 부분 해소됐고 효곡2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북구청사와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도 개선됐다.

또 고령화 및 도심 쇠퇴가 심화하고 있는 오차동역에 지난해 9월 문을 연 복지·문화·체육시설이 있는 복지공간인 오차동커뮤니티센터는 문화건강 프로그램 이용객 수가 개관당시 306명에서 지난 1월 497명으로 매달 증가할 정도로 인기라고 한다.

북구가 앞으로도 생활 SOC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그 성과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화순군 인구정책 빛났다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먼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5명으로 지난 2023년(212명)보다 20%(43명)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도 0.89명에서 1.06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합계출산율(1.06명)의 경우 전남도 평균(1.03명)을 넘어섰다. 2023년에는 0.89명으로 전남도(0.97명)보다 낮았다.

사회적 인구 이동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23년 270명이 감소한 순이동이 2024년에는 24명으로 90%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총 400호), 전남 최고 수준의 결혼장려금 지급, 전입장려금 지급, 천연 보육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 적극적인 인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분석 결과를 들여다보면 2023~2024년 입주자 총 200세대 중 110세대는 화순군 거주자였으며, 나머지 90세대 124명은 타 지역 이주 청년이었다고 한다. 즉 이 사업으로 90세대가 화순군 거주자를 옮겼다는 얘기다.

또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장려금(부부당 1000만원, 5회 분할), 출산양육지원금(첫째·둘째아 230만원, 셋째아 690만원, 넷째아 이상 1150만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출생아 건강관리비 20만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등을 지원해 준 것도 여기에 한 몫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난 1월부터 화순군 출생 아동(2024년 1월 1일 이후)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수당은 1세부터 18세까지 총 4320만원이 지급된다. 다시 말해 화순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받고, 더불어 출생기본수당이 더해진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첫째~셋째 아들은 총 9000만~964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는 총 1억100여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18세까지 중단없이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화순군의 인구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돼 더 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Table with columns: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여균수, 편집국장 최현수,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ju City North District Office.